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

김동겸 선임연구원

최근 발표된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금융태도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노후준비목표가 변경되고 제도 참여율과 기여율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체계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로 인한 노후자산 부족,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이해도 제고 및 합리적 금융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OECD(2011)¹⁾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소비자의 낮은 금융역량으로 심화되었다는 인식하에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금융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을 증진시키고 현명한 금융결정 및 행동을 유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²⁾
- 또한 노후소득원의 한 축인 퇴직연금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노후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근로자의 리스크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근로자 대상의 은퇴교육이 절실한 상황임.

■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³⁾ 점수는 OECD 금융교육 네트워크(INFE)⁴⁾에서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금융이해력은 낮은 수준임.⁵⁾

1) G20/OECD(2011),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2) 특히, 소비자의 금융역량 부족은 가계부채로 인한 파산, 금융소외현상 등 금융시장 안정성 문제와 연결되며, 이는 국가성장 잠재력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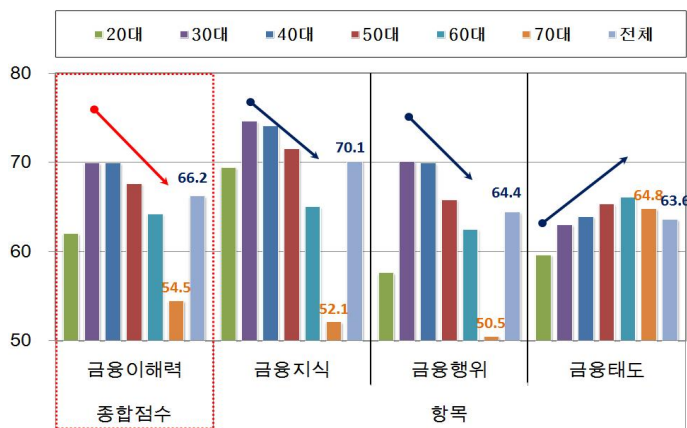
3) OECD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건전한 금융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금융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 지식, 기능 태도, 행동의 결합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지식(합리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 금융행위(건전하고 적극적인 금융·경제생활), 금융태도(미래에 대한 대비자세 등 바람직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의식수준)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4)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 연령이 늘어날수록 금융태도 점수는 증가하는 반면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항목 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54.4점으로 OECD/INFE에서 제시한 최소목표점수(66.7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 같은 현상은 연령증가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로 합리적인 금융행위와 연령 간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음.⁶⁾
-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태도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소비에 대한 성향이 강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에 대한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50.9%, 44.1%로 OECD 16개국 평균(각각 58.0%, 47.9%)보다 낮음(〈그림 2〉 참조).

〈그림 1〉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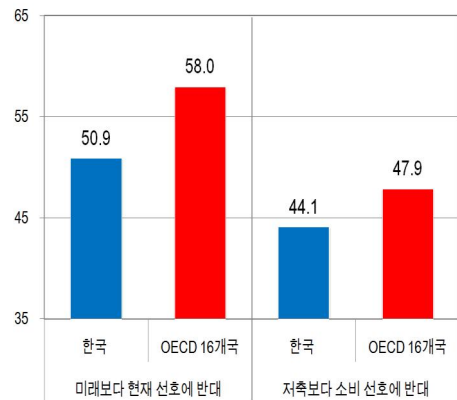
(단위: 점)



주: 금융이해력 종합점수는 금융지식(7점), 금융행위(9점), 금융태도(5점)를 각각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2017).

〈그림 2〉 금융태도에 대한 응답률

(단위: %)



■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각 계층(성별, 연령, 직업군)과 연금형태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음.⁷⁾

- 가입자 선택권이 높은 연금유형에 대한 교육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 퇴직연금보다는 개인연금, DC형 연금보다는 DB형 연금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안함.

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1. 22),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6) Agarwal et al.(2009); 소비자보호원(2016)이나 금융감독원(2015)의 조사에 따르면 규제완화와 더불어 기술발달로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사기에 따른 고령층의 피해구제 접수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7) OECD(2016), OECD Pensions Outlook 2016.

- 계층별로는 연금 가입기간이 긴 젊은층, 남성에 비해 기대수명이 긴 여성, 근로자에 비해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의 혜택이 취약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조함.
 - 다만, 연령이 늘어날수록 금융거래 관계에서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할 때,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령층에 대해 소비자보호 강화도 필요함.
- 금융교육의 수단으로는 정보제공(연금가입조건, 기여금, 예상수령액 세제혜택, 수수료), 은퇴계획 세미나 등의 교육이나 자문을 활용하고 있음(〈표 2〉 참조).
 - 대다수 국가에서는 정보제공이나 일반인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은퇴계획에 대한 세미나 및 컨설팅 제공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음.

〈표 2〉 주요국의 노후준비 및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현황

국가	정보제공 및 인식 강화								교육	자문
	일반정보			개인별 맞춤형 정보						
	웹사이트	캠페인	비교 사이트	공적연금 명세서	사적연금 명세서	온라인 (공적)	온라인 (사적)	급여계산 (예상급여)	은퇴계획 세미나	컨설팅
호주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독일	○	—	—	○	○	○	○	—	—	—
일본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OECD 28개국	28	8	10	18	20	22	15	16	8	7

자료: OECD(2016).

■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노후준비목표가 변경되고 제도 참여율과 기여율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 되므로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체계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피교육자의 연령, 소득, 학력 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금융교육방법에 대한 선호도 및 효과가 다르므로⁹⁾, 피교육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kiri**

8) Bayer et al.(1996); Ntalianis & Wise(2011).

9)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활용률이 낮고, 노년층은 은퇴세미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Lusardi and Mitchell 2013; MacFarland et al, 2005).